

與 “예산 처리 후 논의”... ‘이태원 국조’ 물꼬 트이나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 주호영, 수용 가능성 표명 박홍근 “내부 검토하겠다”... 김 의장 “국회 일 해야” 여야 협의 촉구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가급적 (여야가) 합의 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 대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

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 및 의결 등 시급한 정기국회의 과제를 먼저 해결한 뒤 국정조사 협의를 하자는 일종의 ‘역제안’을 던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자체 설정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일인 24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일(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 명

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모레(23일)에는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았으나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날은 점점 저물어가는데 예산안 심사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그렇다고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가 입을 막 닫고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날 야당은 조사 범위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보안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3野,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신기자단>

여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줄다리기

기재위 257개 법안 심사...野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시 수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소득세법상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

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폐하는 조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협력

홍준표 대구시장, 당정 설득...송갑석 의원, 법안 통과 협력키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송갑석 의원은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송 의원실을 방문해 광주와 대구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통합 신공항 건설 해법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3개 지역의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 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신공항 건설은 관

련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특히 “이름만 다를 뿐 대구경북과 광주의 특별법은 내용상 100% 가까이 일치하는 ‘쌍둥이 법안’이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원내 1당인 민주당도 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력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시장은 “대구와 광주의 두 특별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화답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홍 시장은 또 오는 25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광주와 대구의 합리적 연대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흔들림 없이 민생 챙기겠다”

민주 지도부, 검찰 야당 탄압 규탄...비명계 ‘유감 표명’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용민 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부조정실장 등이 잇따라 구속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에 맞설수록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된다는 점에서 우선 민생을 강조하며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이 제기된다.

2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저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사태 해결의 출발이 신속한 국정조사임을 강조하며 “국정조사에 이

서 특검(특별검사)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한 공세에는 다른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병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공동체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법을 적 용어를 쓴 것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이런 기류와는 달리, 사법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대표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운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된 데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라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겨문도+백도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겨문도 1시간20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	-----------------------------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중식 1회
서도→겨문항 수송 1회 포함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겨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